

2017

Report

of Trend

2017

정부 및 수도권 지자체

규제완화 정책

동향보고

2017. 06. part2 제 76 호

# Contents

## I . 정부 추진동향

1. 고향세 신설해 지방균형발전 고삐 죄다 3

## II . 수도권 추진동향

1. 변양균 , 文정부에 경제해법 ‘코치’ ? 4
2. 수정법 완화하면 일자리 5 천개 생긴다... 2 조원대 경제파급 기대 5
3. ' 수도권 규제 완화 ' 국정위발 훈풍 분다 6
4. 수도권 규제완화 바람 타고 ' 경기 분도론 ' 재점화 7

## III . 비수도권 ( 지역 ) 추진동향

1. 최대 대학재정지원 'LINC+' 이달말 공식 출범 ..  
지역사회 균형발전 기반으로 8
2.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방분권은 엇박자 9
3. 수도권 규제 완화 탓...강원 이전 기업 수 곤두박질 10
4. 지역 균형발전과 청년 실업문제 ‘두 마리 토끼 잡기’ 11
5. " 수도권 무분별 개발 막겠다 "...이헌승 의원 법안 발의 12

## 1. 고향세 신설해 지방균형발전 고삐잡는다

### 01

개요

보도형식	언론	보도일자	2017.06.25
보도대상	전국	보도매체	MK 매일경제

### 02

주요내용

#### 고향에 기부금을 내면 연말정산 등을 통해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'고향세'가 도입

- 25 일 새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고향세 신설과 지방 이전 대기업 세제 혜택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'지방균형발전방안'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조만간 청와대에 보고할 계획
- 고향세의 원조인 일본의 '후루사토(故郷) 납세'는 살고 있는 지방정부에 내는 주민세의 일부를 공제하는 형식으로 사실상 지방정부 간 세금이 이동하는 구조
- 반면 국정기획위에서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에 기부금을 낼 경우 이듬해 연말정산 때 소득세를 되돌려주는 등 대부분 국세를 지원하는 방식이 주로 논의
  - 수도권 지자체의 반발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
  - 다만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되기 때문에 기부형태·소득공제 등 구체적 방안은 국회에서 마련
- 현재 부가가치세 가운데 11% 인 지방소비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
  - 국정기획위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'임기 중에 대통령 공약인 60 대 40 또는 최소 70 대 30 을 달성하겠다'는 식으로 장기 목표를 제시할 계획
- 지난달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고향세 관련 법률 개정안이 대통령 공약에 가장 근접한 형태
  - 개인이 연간 100 만원 한도 내에서 재정자립도 20% 이하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중앙정부에 내는 소득세, 지자체에 내는 지방소득세를 공제받는 형태
  - 구체적으로 기부금 10 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(지방세 10%) 하고, 10 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6.5%(지방세 1.5% 포함)를 소득공제
  - 지방정부에서 공제액의 10% 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수도권 등 대도시 지자체의 반발이 작을 듯
  - 2017 년 기준 재정자립도 20% 를 밑도는 기초자치단체(시·군·구)는 89 개로 전체의 39.4%
-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
  - 지난 참여정부 시절 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 2004 년에 도입된 제도
  - 문재인정부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이 제도를 한층 더 강화해 확대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
  - 대기업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추가로 지역 인재를 고용할 경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서 고용보조금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

**고향세** : 문재인 대통령이 '고향사랑 기부제도'라는 이름으로 공약한 고향세는 도시민이 고향의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일정 금액을 연말정산 등을 통해 되돌려주는 제도

#### 시사점

고향세 신설과 관련하여 지방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의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, 지방분권과 맞물려 재정분권과 관련해서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접근 강조 필요

#### 참치

<http://news.mk.co.kr/newsRead.php?year=2017&no=425044>

## 1. 변양균, 文정부에 경제해법 ‘코치’ ?

## 01

개요

보도형식	언론	보도일자	2017.06.20
보도대상	전국	보도매체	dongA.com

## 02

주요내용

### ■ 슈페터 방식 혁신 강조 ‘경제철학의 전환’ 발간 “통화정책 통한 경기부양 한계… 노동 - 투자 - 토지 규제 풀어야”

- 문재인 정부 경제팀의 ‘대부’ 로 손꼽히는 변양균 전 대통령정책실장 (68 · 사진) 이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담은 경제 관련 책을 출간
-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고용 및 해고의 자유를 늘리는 등 논란이 많은 사안들이 제안되고 있어 새 정부 경제 정책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
- 변 전 실장은 ‘경제철학의 전환’ 이라는 제목의 신간을 25 일 발간
  - 이 책에서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조지프 슈페터 (1883~1951) 의 경제 철학을 저성장 상태에 빠진 한국 경제의 미래 해법으로 제시
  - 슈페터는 혁신을 통한 기업가 정신 고취를 강조한 학자
  - 지난 30 년간 단기 통화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던 정책이 양극화를 심화
  - 노동 토지 자본 등 생산요소들이 자유롭게 결합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함
- 토지와 노동, 투자 등과 관련한 규제 완화
- 한국 사회의 첨예한 논쟁거리 중 하나인 수도권 규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
  -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엄청난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
  - 비수도권을 설득하기 위해 특별기금을 만들고, 고향후원금 공제 제도 등을 도입
  - 그린벨트 제도에 대해서도 해제
- 고용과 해고의 자유를 강조
  -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정규직 해고가 어려워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기피하기 때문
  - 기업 인력 중 최소 1% 의 저성과 인력은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고, 경영 합리화 차원의 구조조정을 인정
  - 다만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고 학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노동자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늘려야 한다는 전제 조건

## 시사점

저성장 시대 극복을 위한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수도권 규제완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집중과 지역균형발전 저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저성장 시대 극복 방안 검토 필요

## 참치

<http://news.donga.com/3/all/20170620/84963023/1#csidxc4b33b15fff4fa3b68fb9e6fc551aa2>

## 2. 수정법 완화하면 일자리 5 천개 생긴다... 2 조원대 경제파급 기대

### 01

#### 개요

보도형식	언론	보도일자	2017.06.23
보도대상	전국	보도매체	중부일보

### 02

#### 주요내용

#### 경기도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등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경우 2 조 원대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 결과

- 22 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자연보전권역 규제합리화 및 친환경 중소기업 규제 해소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2 조 1 천 640 여억 원, 5 천 138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분석
  - 이같은 조사 결과와 함께 최근 새 정부의 기초가 수도권 규제 완화 방향으로 선회함에 따라 경기지역 경제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
  - 현재 수도권 동부지역에 집중된 수도권정비계획법(수정법)상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산업단지의 입지가 6 만㎡ 이하, 건축면적은 1 천㎡ 이하로 제한
- 1982 년 제정된 수정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에 집중된 수도권 규제는 비수도권 지역과 역차별을 유발한다는 비판적 여론이 일어 왔음
  - 특히 군사보호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정법상 규제지역 등 중첩규제로 묶인 경기 북·동부지역은 의료, 교통, 문화, 산업 등 사회 전반적 분야에서 과도한 규제에 묶여 있었음
- 이번 도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산업단지 부지면적을 기존 6 만㎡에서 30~50 만㎡로 확대하고 건축면적 제한을 폐지할시 7 천 963 억 원의 경제효과와 1 천 879 명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또 수정법이 시행된 1984 년 7 월 11 일 이전 인허가된 32 개 기존 공장들의 증설을 완화할 경우 1 조 1 천 957 억 원의 경제효과와 1 천 782 명을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분석
- 이밖에도 도내 11 개 친환경 수출형 중소기업의 규제가 해소되면 1 천 720 억 원 상당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 천 477 명 고용이 가능한 것으로 추계
  - 실제 평택시에 위치한 우리산업의 경우 용도지역 변경이 허가됨에 따라 증설이 가능해져 1 천 524 억 원의 매출상승과 1 천 229 명을 고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바 있음
  - 하남시 소재 만전식품은 국토교통부와 하남시의 협의하에 지구단위계획변경이 가능해져 내년까지 20 억 원 상당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80 명에 달하는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분석
- 도는 앞으로 진행될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발맞춰 자연보전권역 등 낙후지역의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,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4 차 산업 과년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

#### 시사점

지역균형발전은 일자리와 자본 배분과 관련된 사항으로 효과 분석이 확대되어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, 지역균형발전영향평가 등 정책 및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제도화 논의 필요

#### 참치

<http://www.joongboo.com/?mod=news&act=articleView&idxno=1175064>

## 3. '수도권 규제 완화' 국정위발 훈풍 분다

## 01

## 개요

보도형식	언론	보도일자	2017.06.26
보도대상	전국	보도매체	중부일보

## 02

## 주요내용

### 수도권 규제 완화의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도내 국회의원들이 상당수 포진하면서 기대감은 커지고 있음

- 수도권 규제가 완화될 경우 5 천여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경기 지역 정관계는 물론 기업체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
  - 25 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자연보전권역 규제합리화 및 친환경 중소기업 규제 해소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로 2 조 1 천 640 억 원의 자금이 창출되고 5 천 138 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분석
- 현 정부의 기조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필수불가결인 셈
- 실제로 경기도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제외하고 내놓은 일자리 창출 방안
  - 따복하우스 건설에 1 만 7 천 760 명 , 조성중이거나 신규 예정된 11 개소의 물류단지예 약 2 만 100 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거라 내다봤음
  - 따복하우스 건설로 생기는 일자리의 경우 상당수가 일용직 노동직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고 물류단지에서 창출되는 일자리 역시 탁송 · 배송 등 단순 업무에 치우칠 가능성이 높아 현 정부가 기대하는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하기에는 거리감이 큼
- 현재 청년들이 일자리 선택에서 가장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고용안정성 부분이기 때문에 도가 내놓은 일자리들은 한계치가 명확함
- 수도권 규제 완화가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을 해결할 수 있는 키로 급부상할 수 밖에 없는 이유
- 여기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요직에 도내 국회의원들이 다수 포진돼 있다는 점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음
  - 국정기획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진표 ( 수원 무 ) 의원과 박광온 ( 수원 정 ) 의원은 ‘수도권 규제 철폐는 국가 차원의 문제’ 라는 의견을 반복적으로 피력한 바 있음
  - 이와함께 국정기획위 소속 김태년 ( 성남 수정 ) 간사와 윤호중 ( 구리 ) 기획분과 위원장 , 윤후덕 ( 파주 갑 ) 경제 1 분과 의원 , 김정우 ( 군포 갑 ) 경제 2 분과 의원 , 유은혜 ( 고양 병 ) 사회분과 의원 등 다수의 도내 국회의원들이 국정기획위 요직에 포진돼 있다는 점도 수도권 규제 완화 공론화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고 있음
- 지난 21 일에는 이재을 경기도 행정 1 부지사와 국가발전 전략과제를 주도적으로 작성한 이정훈 경기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이 국정자문위를 찾아 규제완화의 필요성과 문제점 등을 전달
- 자문위측으로부터 “경기도가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 왔던 점을 알고 있다” 는 답변을 듣고 온 것으로 전해짐

## 시사점

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지난 정부에서와 같이 규제개혁을 이유로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점을 교훈삼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사전 대응 필요

## 참치

<http://www.joongboo.com/?mod=news&act=articleView&idxno=1175401>

## 4. 수도권 규제완화 바람 타고 '경기 분도론' 재점화

## 01

## 개요

보도형식	언론	보도일자	2017.06.28
보도대상	전국	보도매체	중부일보

## 02

## 주요내용

### ■ 수도권 규제완화가 경기도 일자리 창출에 필수불가결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'분도가 필요하다'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

-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 경기 동·북부 지역의 발전이 탄력을 받게되면서 도의 균형발전이 가능해 질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
-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 동·북부의 규제 완화로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지역들에 산업 시설이 들어올 경우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5천개가 생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
- 실제로 경기 동·북부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수도권 규제
  - 이천·여주 등 상대적으로 서울과 인접한 지역들의 경우도 수도권 규제에 발목이 잡혀 대형 냉동 창고 등의 단순 물류 보관 시설들만 잔뜩 들어서 있을 뿐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대규모 산업단지나 공업단지가 사실상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
  - 대규모 산업단지가 부재하다보니 상주 인구도 부족해 문화 시설이나 주거 여건도 경기 남부 지역과 차이가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도 날이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
-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경기 동·북부 지역이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함
  - 낙후된 경기 동·북부 지역의 개발이 탄력을 받게되면 관련 종사자들과 시설들이 유입되고 자연스럽게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경기 남부 지역과의 격차도 줄어들 수 있게 됨
- 현재 경기도의 분도가 불가능한 원인으로 가장 우선시 손꼽히는 이유가 경제 자립화 문제인 것을 감안할 때 수도권 규제 완화만 이뤄져도 분도론의 가능성은 크게 높아질 전망
- 일각에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현실화되도 분도론은 시기상조라는 의견
  - 접경, 군사보호지역 등 지리적 여건과 정치적 상황상 인프라 구축이 어렵고 입지 메리트도 떨어지는 경기 동·북부 지역을 따로 분도했을 경우 자립이 어려워 난맥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
- 남경필 경기지사
  - 경기북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법이라는 이중 규제로 모든 분야가 낙후돼 있는 상황에서 분도를 진행할 경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2개의 도가 탄생할 수 있다고 분도론을 정면 반박하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음
- 도 관계자
  - 수도권 규제 완화로 경기 동·북부 지역이 발전하게 되면 경기도가 지금보다는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
  - 하지만 균형발전이 이뤄진다고 해서 분도가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화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수반돼야 함

## 시사점

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 문제는 지역내 불균형과는 다른 접근방식이 요구되며, 수도권내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 동북부 지역 보다도 낙후된 비수도권 지역이 더 많은 점에서 수도권내 낙후지역 문제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당위성에 대하여 지속적 대응 필요

## 참치

<http://www.joongboo.com/?mod=news&act=articleView&idxno=1176046>

## 1. 최대 대학재정지원 'LINC+' 이달말 공식 출범 .. 지역사회 균형발전 기반으로

### 01

#### 개요

보도형식	언론	보도일자	2017.06.18
보도대상	전국	보도매체	전자신문 EtnEws

### 02

#### 주요내용

#### ■ 국내 최대 대학 재정지원 프로그램인 '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(LINC+, 링크플러스)' 사업이 이달 말 출범식과 함께 공식 가동

- 지난 9일 '일반대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' 가선정을 마지막으로 선정작업을 마쳤고, 이달 말 교육부와 참여대학이 모여 공식 출범
  - 링크플러스 사업은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(LINC) 과 사회맞춤형학과 활성화 사업을 합친 것
  - 예산 3,271 억원 : 일반대 산학협력 고도화형 2163 억원 (55 개교),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220 억원 (20 개교), 전문대 산학협력 고도화형 130 억원 (5 개교),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758 억원 (44 개교)
  - 교육부는 링크플러스 사업이 산학개념을 확립했던 링크 사업을 업그레이드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
  - 교육부는 참여 대학을 지원하는 한편 사업 탈락 대학에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
- 교육부 김영곤 대학지원관
  - 중장기적으로 대학이 지역사회 균형 발전을 이루는 매개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
  - 정책적으로 풀어줄 문제를 검토하고 사업계획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밀착마크해 도울 것
- 교육부는 평가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정부 재정지원사업 최초로 평가위원 중 50% 이상을 공모 선발
  - 링크 사업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연구중심대학 신청도 이어짐
  - 교수 평가에 산학협력 실적을 반영하도록 학칙 개정을 유도한 결과물
  - 지역 기업 · 기관과 맺은 업무 협약도 5 만개
- 링크플러스로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대학의 연구개발 (R&D) 기능을 높임
  - 사회 재교육 비용을 줄이고, 지역 기업 경쟁력을 강화
  -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일자리를 창출
  - 대학과 지역 기업 · 기관이 산학협력으로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하게 도움
- 링크플러스를 시작으로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개편
  - 여러 재정지원사업을 연구 · 교육 · 산학협력 · 대학자율역량강화 구조로 단순화할 방침
  - 내년 마무리되는 대학 특성화사업 (CK),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사업 (PRIME) 도 2019 년부터는 새로운 형태로 재편

#### 시사점

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며, 다양한 형태의 지원 방안을 통해 연구기반 및 우수인재 양성과 함께,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필요

#### 출처

<http://www.etnews.com/20170616000272>

## 2.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방분권은 엇박자

### 01

개요

보도형식	언론	보도일자	2017.06.18
보도대상	전국	보도매체	충북일보

### 02

주요내용

####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방분권 요구 목소리가 커짐과 동시에 수도권 규제완화가 수면위로 떠오름

-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를 노골적으로 시사
- 한국무역협회는 수도권규제완화 등을 골자로 한 무역업계 정책제언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
- 서울 · 경기 여야 국회의원들도 수도권정비계획 등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음
  -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임종성 (경기 광주을) 의원은 지난 15 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한 재평가를 촉구
- 균형발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추진
  - 수도권 규제가 핵심인데 새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역설
  -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발상
- 지난 2006 년 고시된 제 3 차 수도권정비계획은 3 년 뒤인 오는 2020 년에 종료
  -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의 인구 · 산업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한 계획
  - 수도권 공간구조를 정립하고 권역별 정비방향과 인구 · 산업 · 인프라 · 환경 등 부문별 계획을 담는 장기종합계획
  - 지난 2011 년과 2016 년 두 차례에 걸쳐 평가 ( 국토부장관은 5 년마다 평가)
- 수도권 규제완화를 둘러싼 수도권과 지방 간 격한 논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
  - 분명한 건 새 정부가 지방분권을 구체화 하고 있다는 점인데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분권과 어울리지 않는 조합
-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근간을 훼손하기 쉬움
  - 수도권 규제완화는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황폐화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가시킴
  - 더 이상 지방에 희망이 없고 지방분권도 물 건너갈 것으로 예측되는 이유도 여기 있음
-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음
  - 2015 년 기준으로 수도권은 전체 면적의 17.6% 에 불과하지만 인구는 75.4%
  - 국내 사업체나 사업체 종사자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 있으며, 대학이나 의료기관, 지역내총생산액도 수도권에 집중
-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를 수차례 약속
  -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지방분권은 엇박자
- 오는 21 일 충북에서 첫 '전국지방분권협의회' 가 열림
  - 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란 시대적 소명 실천에 마중물이 됐으면 함

시사점

지방분권의 목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 등에 대하여 종합적 관리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

출처

<http://www.inews365.com/news/article.html?no=497414>

## 3. 수도권 규제 완화 탓...강원 이전 기업 수 곤두박질

## 01

## 개요

보도형식	언론	보도일자	2017.06.20
보도대상	전국	보도매체	연합뉴스

## 02

## 주요내용

### ■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으로 강원도로 이전하는 기업 수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

- 20 일 사단법인 강원평화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00 년 8 개에 불과했던 도내 이전 기업 수는 참여정부의 수도권 규제 정책에 힘입어 2005 년 131 개로 급증
-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은 이명박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을 본격화하면서 2010 년 66 개로 반 토막 나고 , 2011 년에는 30 개로 떨어짐
  - 이후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은 연 30 · 50 개에 머무르고 있음
- 사단법인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최근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김진표 위원장이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시
- 사단법인 강원평화경제연구소
  - 김 위원장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첨단산업을 잡으려면 수도권 규제 완화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참여정부의 지역균형 발전전략을 잇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 방향과도 배치
  -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, 경영안전자금 등 비수도권 기업 지원 강화 ,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

## 시사점

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지속적인 데이터 확보 및 분석을 통해 논리적 대응 방안 모색 필요

## 참치

<http://www.yonhapnews.co.kr/bulletin/2017/06/20/0200000000AKR20170620083400062.HTML>

## 4. 지역 균형발전과 청년 실업문제 ‘두 마리 토끼 잡기’

### 01

개요

보도형식	언론	보도일자	2017.06.22
보도대상	전국	보도매체	한겨레

### 02

주요내용

#### ■ 혁신도시 공공기관 30%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 왜 나왔나

- 문재인 대통령이 22 일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을 30% 이상으로 하도록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를 지시한 것은 지역 균형발전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포석
- 전국 혁신도시 지역 자치단체장으로 이뤄진 전국혁신도시협의회
  - 협의회가 요구해왔던 35% 보다는 조금 미흡하지만,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30% 가 실제로 공공기관 신규채용 과정에서 지켜진다면 매우 환영할 일
- 지난 4 월 말 기준 청년 실업률은 11.7% 에 이를 만큼 청년실업 문제가 갈수록 심각
  - 특히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, 비수도권 청년들의 고통이 가중
  - 이는 지역일자리 부족, 지방대학 기피, 지역인재 부족, 지역경쟁력 약화 등 악순환으로 연결되고 있음
  - 지역에서 ‘좋은 일자리’ 로 꼽히는 전국 혁신도시 공공기관 115 곳
    - 지역인재 채용률은 2014 년 10.4%, 2015 년 13.2%, 2016 년 11.1%
    - 지난해 경북과 강원 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각각 7.4% 와 8.8% 로 평균치에 훨씬 미치지 못함
    - 이전에도 지역인재를 채용하면 공공기관 기관평가 때 가산점을 주는 등 지역인재 우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, 권고사항에 그치다 보니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 현실
- 이 때문에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지난해 11 월 결의문을 발표하는 등 ‘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% 의무채용’ 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
- 최근 행정자치부 장관에 임명된 김부겸 의원과 김광수 · 김동철 의원 등도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을 높이는 것을 뼈대로 하는 ‘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’ 을 내기도 했음
-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선거 기간인 지난 1~2 월 광주, 경남 진주, 전북 전주 등을 방문해 “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맞게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과 지역인재 채용할당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” 고 거듭 약속
- 김중호 대구대 취업지원팀장
  - 대구 동구 혁신도시에 많은 공공기관이 이전했지만, 지역대학 졸업생 채용은 너무 적어서 체감할 수 없을 정도
  - 블라인드 채용과 지역인재 채용할당제가 합쳐지면 지역대학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음
- 강효석 전남도 일자리정책지원관
  -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은 그동안 ‘뽑고 싶어도 마땅한 인재가 없다’ 고 불평
  - 하지만 지역에서 대학을 나와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면 누가 떠나겠는가. 지역할당 30% 를 이행할 수 있도록 기관장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후속 조치를 잘해야 함

시사점

지역의 열악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할 때, 혁신도시 이전기관을 중심으로 한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는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지역에 미치는 전후방 연관효과가 높다는 점에서 제도화 필요

참치

<http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area/799923.html#csidxa4aff39ec545e37bce80b868d86ce4c>

## 5. " 수도권 무분별 개발 막겠다 "...이헌승 의원 법안 발의

### 01

#### 개요

보도형식	언론	보도일자	2017.06.30
보도대상	전국	보도매체	노컷뉴스

### 02

#### 주요내용

#### ■ 수도권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도록 수도권 총량규제의 산출근거와 개발허가 통계의 집계 ·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

-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국회의원 ( 부산진을 ) 은 30 일 '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 ' 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음
  -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총량규제와 개발행위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
  - 하지만 지난 12 년 ( 2006~2017 ) 간 정부의 총허용량 ( 35 km<sup>2</sup> ) 이 실제 공장개발면 ( 24 km<sup>2</sup> ) 보다 1.4 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규제의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
- 이에 따라 수도권 내에서 공장만 24k km<sup>2</sup> 증가했는데 , 이는 여의도 면적 ( 8.4 km<sup>2</sup> ) 의 2.86 배 크기
- 또한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, 자연보전권역에서 제한된 개발행위를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한 결과가 체계적으로 집계돼 공개되지 않음에 따라 권역별 행위 제한도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
- 이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
  - 수도권 과밀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규제의 실효성이 담보될 필요가 있음
  - 수도권 총량규제 산출근거와 개발허가 통계의 집계 · 공개가 의무화되면 국민의 감시 속에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완화가 자제될 수 있을 것

#### 시사점

수도권 과밀 방지 및 체계적 관리 차원에서 수도권 총량 규제 등 실질적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지역으로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

#### 출처

<http://nocutnews.co.kr/news/4808225#csidxf593c2bbec870b38d1cbf0a8efbe0f3>